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30
2015. 7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5.6.1~6.30)

건축문화 부문

-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법무부, 한국셉테드학회와 2015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 문화부,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실시
- 행복청,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 공고
- 대전시, 제18회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 부산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서울시, '서울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충북도,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 강원도, 2015년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가 공모
- 대구시, 2015년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
- 대전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 대전시, 제7회 도심활성화포럼 개최

녹색 건축·도시 부문

- 국토부, 고효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 선정
- 경남도, 건축물 옥상녹화로 '녹색도시' 만든다
- 대구시, 학교 유휴공간 활용해 '명상' 숲조성
- 인천시, 선도형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선정
- 서울시, "경의선숲길" 1단계(대흥동 일대) 이어 2단계 구간 개장
- 산림청,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개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자동폐장장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부,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접수 결과
- 국토부,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및 3만8천호 입지 추가 확정
- 국토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선정
- 광주시, 인본디자인시범사업 추진
- 충북도·미래부,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복합형 친환경에너지 타운 본격 조성
-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7년 초 준공·개원
- 서울시, 세운상가 활성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 전남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광양·강진 2곳 추가
- 경남도, 창원·밀양시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 대구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본격 추진
- 서울시, 내곡지구 등 행복주택 807호 첫 공급
- 울산시,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자료로 본 2015년 상반기

건축·도시 분야 주요 정책키워드

- 보도자료로 본 2015년 상반기 건축·도시 분야 주요 정책키워드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7월호 (통권 30호)

-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5. 7. 27
 - 발행인 : 제해성
 - I S S 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건축문화 부문

- 8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8 법무부·국토교통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공동 발간
- 9 문화부,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실시
- 10 행복청,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 공고
- 10 인천시,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part2) 기획사업 진행
- 11 경북도, '경북형 한옥' 개발 본격화
- 12 서울시, '서울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12 충북도,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 13 강원도, 2015년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가 공모
- 13 대구시, 2015년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
- 14 2015 법무부-한국셉테드학회 공동학술세미나
- 14 대전시, 제18회 도시디자인 포럼
- 14 부산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정책세미나
- 14 대전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 14 대전시, 제7회 도심활성화포럼 개최

녹색건축·도시 부문

- 15 국토부, 고품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 선정
- 16 경남도, 건축물 옥상녹화로 '녹색도시' 만든다
- 16 대구시, 학교 유휴공간 활용해 '명상 숲' 조성
- 17 서울시, "경의선숲길" 1단계(대흥동 일대) 이어 2단계 구간 개장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19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19 국토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2 국토부,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3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4 국토부,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접수 결과
- 24 국토부,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및 3만8천호 입지 추가 확정
- 25 국토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선정
- 26 광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7 울산시, '도시창조 기본계획' 수립
- 28 광주시,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제정

- 28 부산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29 광주시,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 29 광주시, 인본디자인시범사업 추진
- 30 충청도·미래부,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복합형 친환경에너지 타운 본격 조성
- 31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7년 초 준공·개원
- 32 서울시, 세운상가 활성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 34 전남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광양·강진 2곳 추가
- 34 경남도, 창원·밀양시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 35 대구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본격 추진
- 36 울산시,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자료로 본
2015년 상반기 건축 도시 분야
주요 정책키워드

- 37 보도자료로 본 2015년 상반기 건축·도시 분야 주요 정책키워드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이달의 건축문화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주요 법률 시행과 관련한 소식 및 공공 디자인과 도시재생에 대한 행사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발표되었다.

국토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알렸고, 법무부는 한국셉테드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소식을 알렸다.

이밖에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도시재생 포럼' 개최, 서울시, '도시디자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 '2015 컬러풀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건축문화계 소식들이 이어졌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고층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선정 발표에 따른 지자체 사업 선정 소식과 옥상녹화 및 도시숲 조성과 관련한 소식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국토부는 고층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송도의 주택단지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의선 숲길' 프로젝트 진행과정중 2단계 구간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경의선 구간 일대 새로운 명소로 소개했다. 또한 대구시는 2015년도에 추진되는 학교 유희공간 활용 '명상 숲'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각종 법률 제개정 및 지자체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주거지원과 관련한 소식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등의 법률 제·개정 소식을 알렸다.

광주광역시와 '누구나 걷고싶은 보행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며,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또한 각각 '울산시 도시창조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혀 지자체별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국토부,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서울시, 세운상가 활성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등 도시재생 및 주거지원과 관련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발표가 있었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는 총 42건이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 14건(66.7%)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수집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11건(26.2%),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각각 1건(2.4%)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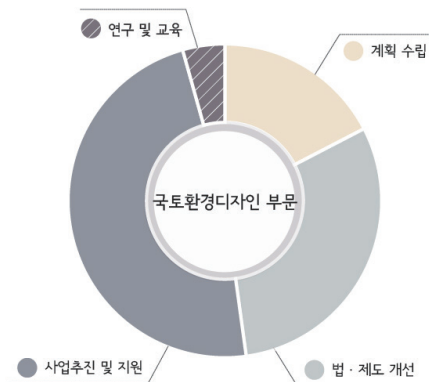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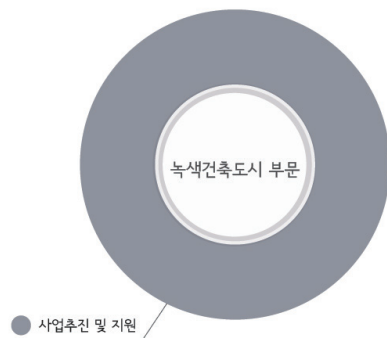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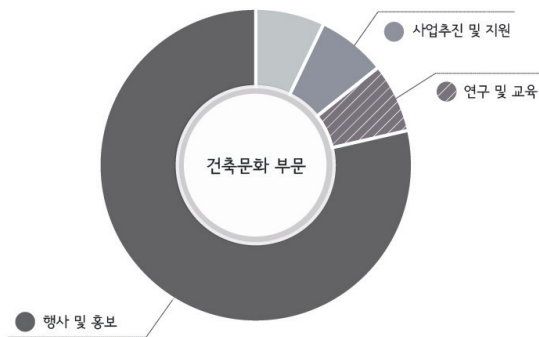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충남, 제주, 세종, 경기도를 제외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8건(66.7%)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수집되었다. 이 중 서울시 5건(11.9%), 광주시 4건(9.5%), 대구·대전 각각 3건(7.1%), 이밖에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인천, 전라, 충북에서는 1건(2.4%)~2건(4.8%)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수집되었다.



부문별로는 전체 발표·수집된 보도자료 42건 중 23건(54.8%)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이며 ‘건축문화’ 부문의 정책사업이 14(33.3%),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정책사업이 5건(11.9%)이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은 국토부의 발표자료가 9건(21.4%)이었고, 나머지 14건(33.3%)은 광주, 서울, 울산 등 8개 지자체의 발표자료였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교통부	1(2.4%)	1(2.4%)	9(21.4%)	11(26.2%)
문화체육관광부	1(2.4%)	—	—	1(2.4%)
법무부	1(2.4%)	—	—	1(2.4%)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2.4%)	—	—	1(2.4%)
합계 (중앙부처)	4(9.5%)	1(2.4%)	9(33.3%)	14(66.7%)
강원도	1(2.4%)	—	—	1(2.4%)
경상남도	—	1(2.4%)	1(2.4%)	2(4.8%)
경상북도	1(2.4%)	—	—	1(2.4%)
광주광역시	—	—	4(9.5%)	4(9.5%)
대구광역시	1(2.4%)	1(2.4%)	1(2.4%)	3(7.1%)
대전광역시	3(7.1%)	—	—	3(7.1%)
부산광역시	1(2.4%)	—	1(2.4%)	2(4.8%)
서울특별시	1(2.4%)	1(2.4%)	3(7.1%)	5(11.9%)
울산광역시	—	—	2(4.8%)	2(4.8%)
인천광역시	1(2.4%)	1(2.4%)	—	2(4.8%)
전라남도	—	—	1(2.4%)	1(2.4%)
충청북도	1(2.4%)	—	1(2.4%)	2(4.8%)
합계 (지방자치단체)	10(23.8%)	4(9.5%)	14(33.3%)	28(66.7%)
총 계	14(33.3%)	5(11.9%)	23(54.8%)	42(10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세부 분야별로는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료가 17건(40.5%), ‘행사 및 홍보’ 관련 보도자료가 11건(26.2%)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사업이 이달에 가장 중점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밖에 ‘법제도 개선’ 관련 보도자료는 8건(19.0%), ‘계획수립’ 및 ‘연구 및 교육’ 보도자료는 각각 4건(9.5%), 2건(4.8%)씩 이었다.

「건축문화」에서는 ‘행사 및 홍보’ 관련 보도자료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보도자 각각 11건(26.2%)으로 부문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녹색건축도시」 부문은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보도자료만 5건(11.9%)인 것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4(9.5%)	4(9.5%)
법·제도 개선	1(2.4%)	—	7(16.7%)	8(19.0%)
사업추진 및 지원	1(2.4%)	5(11.9%)	11(26.2%)	17(40.5%)
시스템 구축	—	—	—	—
연구 및 교육	1(2.4%)	—	1(2.4%)	2(4.8%)
행사 및 홍보	11(26.2%)	—	—	11(26.2%)
총 합계	14(33.3%)	5(11.9%)	23(54.8%)	42(10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우수건축자산 철거 대신 개축 쉬워져...건축문화 다양성 기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공포된('14.6.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동 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자가 희망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¹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②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③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2015.06.04.

법무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공동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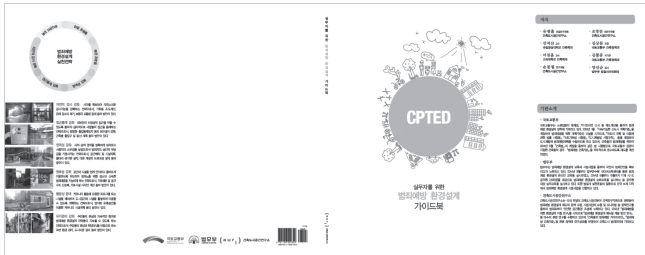
법무부, 국토교통부

개정된 건축법 제53조의2('14. 11. 29. 시행)에 근거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15. 4. 1.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편의점과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단독 주택 등도 건축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의무화에 따라 국내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통합정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조항별 및 용도별(건축물·도로·공용시설 등) 실무해설 매뉴얼 필요에 따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북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간하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각종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수행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관련 분야 실무자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가이드북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를 통해 e-book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가이드북 표지

2015.06.05.

문화부,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실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문화디자인 아이디어의 자원화 목적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는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 및 문화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하여 바람직한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 부문'과 '문화 디자인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적용 사례를 찾는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 부문'의 공모는 6월 15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접수하며, 공공디자인으로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문화디자인 지원 부문'의 공모는 6월 15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 및 현장 심사(우수 사례 부문),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

메이션) 심사(문화디자인 지원 부문) 등을 진행해 당선작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역할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를 진행합니다.
'우수사례' 및 '문화디자인지원'
부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수사례 부문 6월15일(월) - 9월 4일(금)	문화디자인 지원 부문 6월15일(월) - 8월 7일(금)
신청내용 -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공공디자인 발원지를 발굴하고, 사회적 소통을 위한 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및 서비스디자인을 실현한 사례 - 지역의 공공자원을 개발 및 주민의 문화·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디자인 제형 제시에 성공한 사례 - 마을 환경 조성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자인 과정이 중시되고 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한 사례 - 시설 개선 및 디자인 사업 이후, 사용 관리 및 유망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활동도 및 만족도가 높은 공공디자인 사례 - 지자체·주민·기업·전문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한 사례를 해결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일정한 디자인 발원지 사례 - 해당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맥락을 알아보고 발원지인 문화·경제·사회·환경을 제시한 콘텐츠디자인 사례 * 역대 수상작 www.kcdf.kr/view/cms/award/award/aw/2014.jsp	신청내용 -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적성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제시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공동체와 소통과 문화적 활동을 전연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보전에 기여하는 시간정보·콘텐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기타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신청 > 후원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발표 접수기간 - 6월15일(월) ~ 9월 4일(금)	신청방법 - 신청 > 후원 > 서류심사 > PT심사 > 중간평가 > 최종심사 > 결과발표 접수기간 - 6월15일(월) ~ 8월 7일(금)
접수방법 - 2015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홈페이지(www.kcdf.kr/designaward)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접수방법 - 2015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홈페이지(www.kcdf.kr/designaward)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응모자격 - 제한없음 +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 실행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지역전문가, 문화기획자, 언론기자, 협업디자이너 등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실행에 있는 개인(팀) 또는 사업자, 단체	응모자격 - 제한없음 + 문화기획, 건축, 미술, 언론, 사진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단체(팀) 또는 문화예술단체, 업체 등 사업자 개인 및 팀에 가능
심사기간 - 서류/현장심사: 9월 중 - 최종심사: 10월 중	심사기간 - 서류/PT심사: 8월 중 - 중간평가: 9월 중 - 최종심사: 10월 중
결과발표 및 시상일정 - 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시상	결과발표 및 시상일정 - 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시상
시상내용 - 대상(명량상): 1명(팀)(300만원) - 최우수상: 2명(팀)(100만원) - 우수상: 2명(팀)(50만원)	시상내용 - 대상(명량상): 1명(팀)(300만원) - 최우수상: 2명(팀)(100만원) - 우수상: 2명(팀)(50만원)

*세부 일정은 주최 측의 변경으로 단차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enter for Design & Culture

2015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포스터

2015.06.15.

행복청,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 공고 10월 당선작 선정, 2018년 상반기 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경관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30일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에 대한 우수 설계안 도출을 위해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은 2-4생활권(세종시 나성동) 중앙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약 1km의 구간에 폭 60m 규모로 조성된다.

이 광장은 행복도시 2생활권과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이 위치한 308만 m²의 중앙녹지공간을 잇는 경관·보행축인 데다 주변으로 국립박물관단지,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들이 밀집한 도시의 중심문화공간이다.

특히 도시의 핵심 상업거리가 될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열십자(+)로 연계 개발돼 행복도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참가신청은 30일부터 오는 8월 31일(오후 5시)까지이며, 질의접수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질의응답은 7월 30일이다.

작품접수는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오후 5시)까지이고 기술심사(10월 1~5일), 본심사(10월 6~7일)를 거쳐 10월 8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상징광장 및 주변 환경

2015.06.30.

인천시,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part2) 기획사업 진행 유휴 공간 기부와 문화예술(레지던스)프로그램 매칭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레지던스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part2] 기획사업을 진행한다.

레지던스프로그램[part2] 기획사업은 기존의 레지던스프로그램[part1] 사업인 공간 운영주체 중심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진화시킨 사업으로, 활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는 공간 소유자와 공간이 필요한 예술가(단체)들을 연결시키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월1일부터 17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의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참여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재단에서 공간에 대한 검토 진행 후 활용에 적합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매칭한다.



문의처_ 예술지원팀 032)455-7154

신청 및 접수_ 접수기간: 2015.6.1 ~ 17

_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_ 본 개시물의 별첨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이메일_

※ 기부된 공간의 활용 여부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IFC 인천문화재단

■ 레지던스프로그램[part2]

2015.06.03.

경북도, '경북형 한옥' 개발 본격화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편리하고 쾌적하면서 전통의 품격을 갖춘 '경북형 한옥' 개발에 본격 나섰다.

경북형 한옥이 활성화 되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합리적으로 계승·발전시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경북형 한옥' 기본 모델

2015.06.22.



서울시, '서울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2월까지 운영. 수강생 100명 모집 6/8~19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디자인분야 전문가와 함께 '도시디자인'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친숙하고 관심이 많은 다양한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2015 서울 도시디자인아카데미」를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디자인아카데미를 보완해 시민들이 친숙하고, 관심 있는 도시디자인분야를 쉽게 설명하는 서울 도시디자인아카데미로 새롭게 개편한 것.

「2015 서울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디자인과 시민'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월 1회씩 총 8회 진행한다. 강의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설계·디자인 전문가, 건축가, 교수, 개그맨 등 다양한 강사진이 담당한다.

'나는 뛰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의 저자인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6.24), '착한 디자인'의 저자인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7.15), SBS '시크릿 가든'의 현빈의 집을 설계 및 제작한 백종환 WGNB 소장(8.19), 세계3대 디자인 어워드 모두 수상한 장순각 한양대 교수(11.25), 개그맨이며 국민안전문화협회회장인 서승만 회장(12.16) 등 도시 디자인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관심이 많은 공원의 예술공간화, 그림같은 집, 마을 만들기, 참한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스토리텔링과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강의 보완사항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답사 등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강의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5회 이상 이수한 시민은 수료증을 받게 되며, 시는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디자인 정책 추진시 의견수렴 등 시정 소통의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5.06.08.

충북도, 제4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공모전 개최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 주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이번 공모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새로운 측면의 공간가치를 재발견하여, 나은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을 주제로 잡았다. 참가자들은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과 기능성에 충실한 자연친화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등 4개 부문이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출품 수는 개인 및 팀당 2점 이내이며, 작품접수는 오는 9



월 7일에서 11일까지(18:00까지) 충북도 공공디자인 홈페이지(pubdesign.cb21.net)에서 1차 접수한다. 1차 심사결과 9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심사작 통과작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는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수상자는 10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 1점(500만원), 금상 2점(각300만원), 은상 2점(각200만원), 동상 5점(각100만원) 등 총 40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활용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 기타(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 등 다양한 기준을 잡고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추후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5.06.08.

강원도, 2015년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가 공모

강원도 건축과

강원도는 2015년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 9(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추가 공모를 통한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한옥 건축 지원사업은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발전·계승시키고 한옥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금년도 사업 신청자에 대한 1

차 심의가 완료된 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추가 공모에 따라 9동 내외의 한옥 건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신청접수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다.

신청은 7. 10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의 건축부서에, 선정결과는 8월중 통지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한옥 건축 지원대상자는 신축기준 및 규모에 따라 2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되며,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6.14.

대구시, 2015년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새로운 상상력” 주제로 아이디어 발굴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대구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5년 컬러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7회째가 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 도시디자인 공모전’과 ‘학생부 디자인 경시대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수 작품은 대구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개통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및 공공공간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신천, 금호강 등 주변 공간에 대해 새



로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일상 생활공간을 디자인 대상으로 한다.

출품작은 9월 14일(월)에서 9월 18일(금)까지 접수 받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34점에 대해서는 대구 시장상과 총 2천 5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지며,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대구시장상과 5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작품 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심화하여 사업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경시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별로 사전 참가 신청한 학생들이 10월 9일(한글날) 한 장소(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모여 서로의 디자인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서, 대회를 통해 디자인하는 즐거움과 상도 받는 멋진 경험을 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시대회에 참가하려면 9월 3일(목)에서 9월 11일(금)까지 대구시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시대회 디자인 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학생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출품작들은 10월경 ‘2015디자인대구 페스티벌’행사 시 전시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015.06.19.

■ 기타 건축문화 소식

2015.06.05.

2015 법무부-한국셉테드학회 공동학술세미나

노보텔 엠베서더 강담 2층 삼페안-A홀
(주최) 법무부, 한국셉테드학회

2015.06.03

대전시, 제18회 도시디자인 포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주최) 대전광역시

2015.06.4.

부산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정책세미나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주최·주관)(사)한국도시설계학회

2015.06.01.

대전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옛 충남도청
(주최)대전광역시

2015.06.25.

대전시, 제7회 도심활성화포럼 개최

옛 충남도청
(주최)대전광역시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부,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 선정 886세대 규모 단지...난방에너지 최대 77% 감축 기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 단지로 「송도 6·8공구 A11블록 공동주택 단지」(886세대, 현대건설)를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지상 34층 규모) 및 대규모 단지(886세대)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신기술 적용,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정주여건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국내 고층형 아파트로서는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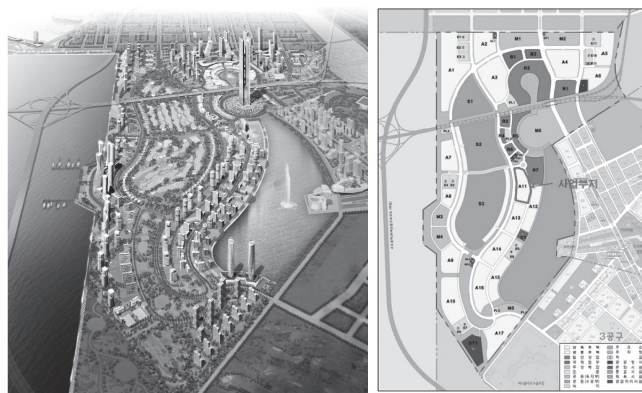
특히,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에너지비용부담을 인천시 평균 대비 전기비용 50% 이상, 난방비용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비용 상승 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², 용적률 5% 상향

및 세제감면³ 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서도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5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는 11월13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는 공모기간 내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2015.06.24.

²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³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15% 이내 감면

경남도, 건축물 옥상녹화로 '녹색도시' 만든다 올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4개시 6곳 본격 추진

경상남도 건축과

경남도는 올해 창원시 등 4개시 공공건축물 옥상 6곳에 4억 3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의 열섬현상 감소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건축물 옥상에 조경수 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지역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효율적인 녹화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총 47곳(공공부문 37, 민간부문 10)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7천 4백㎡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어 2021년까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157곳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여 경남도 녹색네트워크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5월에 착공한 밀양시 삼랑진읍사무소와 김해시 대청동 장유도서관은 7월 초, 6월에 착공한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과 의창구 의창동 복지회관은 8월 초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고, 양산시 물금읍 종합사회복지관과 어곡동 강서주민편익시설은 6월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완료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개방성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을 우선 시행하여 사업효

과를 극대화 하고,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뿐만 아니라 신축하는 건축물도 평지붕일 경우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등 옥상녹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밀양시 영어도서관(전)



밀양시 영어도서관(후)



의령군 의병박물관(전)



의령군 의병박물관(후)

2015.06.18.

대구시, 학교 유휴공간 활용해 '명상 숲' 조성 동부중학교 등 6개소 명상 숲 조성...학습·휴식공간 제공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

대구시는 청소년들에게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수성구 동부중학교 등 6개소에 명상 숲 조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청소년들에게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

역주민들이 녹색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숲을 수성구 동부중학교 등 6개소에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숲을 조성하였다.

시는 산림청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20개교에 학생들을 위한 녹색 희망의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동부중학교, 명덕초등학교, 아양초등학교, 달서초등학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경상여자고등학교에 녹색숲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인근 주민들에게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학교 내 명상숲을 조성하였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숲에서 사색과 오감만족을 체험하고 정서적 안정감, 스트레스 완화 등 청소년들에게 숲과 어울려 사랑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푸른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남구)



■ 동부중학교(수성구)

2015.06.22.

서울시, “경의선숲길” 1단계(대흥동 일대) 이어 2단계 구간 개장

‘연남동·염리동·새창고개’ 경의선 폐철길 2km 숲길 변신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시는 지난 '12년 4월 개장한 1단계 대흥동 구간(760m)에 이어 경의선 폐철길 2단계 구간 총 2km를 ‘경의선숲길’로 변신 완료, 27일(토) 시민에게 개방한다.

이번에 추가 개방되는 ‘경의선숲길’ 2단계 구간은 ①연남동(1,268m) ②새창고개(630m) ③염리동(150m)으로, 서울시는 각 장소별 매력과 이용 포인트를 소개했다.

이로써 ‘경의선숲길’ 총 6.3km 중 2.7km가 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년 5월이면 전 구간 숲길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



‘경의선숲길’은 수명을 다한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상으로 달리다 '05년 지하화를 시작한 경의선의 좁고 긴 지상구간(용산구 문화체육센터~마포구 가좌역, 총연장 6.3km, 폭 10m~60m)에 조성 중이다.

‘경의선숲길’이 모두 완성되면 주택가, 도심의 고층빌딩 사이를 가로질러 서강대, 홍대·연남동 변화가, 동네 상가, 전원주택지를 달려 홍제천에 이르는, 과거와 현재를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새로운 창고인 만리창(1608년 설립)과 상인들의 애환이 담긴 새창고개, 일제강점기 인공하천인 선통물천, 1977년 난지도 제방 축조 공사로 지상에서 사라진 세교천 등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경의선숲길에는 길마다 크고 작은 잔디마당과 광장이 연결돼 있다. 이 공간들은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해가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완성해가게 된다. 한 마디로 ‘비우고 채워가는 공원’인 셈

아울러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2단계 시민개방과 함께 숲길은 영의 패러다임도 기존 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발전시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경의선숲길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비영리단체 ‘경의선숲길지기’가 발족했다. 시민, 전문가, 기업들로 구성된 ‘경의선숲길지기’는 경의선숲길을 서울시 최초로 시민 주도로 운영하는 공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경의선숲길지기’는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을 관리·운영하는 ‘하이라인 친구들’처럼 시민이 주도하는 운영 시스템이 최대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금 마련 방법과 관리 방

안 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경의선숲길지기’는 ▲연남동지기 ▲창전동지기 ▲대흥동지기 ▲염리동지기 ▲도화원효지기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우선 운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능기부로 공연, 공예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공원 운영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015.06.26.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부실공사 방지·품질강화 유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전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행정예고(6.8.~6.30.)를 한다고 밝혔다.

2015.06.05.

국토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6월 22일 제정·공포('15. 12.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⁴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⁴ (연계 정보시스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⁵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⁶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5.06.25.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부실 건축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난 경우 : 1억원→10억원)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⁵ (교육 위탁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⁶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6월29일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 유통에 무방비하므로,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는 불법 행위 적발 확률과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건축업무에 대한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취소를 하는 1:2Strike Out제를 마련하였다.

② 불법행위 감독체계 보완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전문성·인력 등이 부족하므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술사 도장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③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마련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싱크홀 등)에 미치는 안전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전에 초고층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상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요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의 감리 강화를 위해,

해당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⑤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로 안전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중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타 법률 위반(분양법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 3억원)에 비해 건축법 위반 시 낮게 측정된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익을 낮췄다.

2015.06.29.

국토부,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6.30~8.10)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법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 출입문 당 약 70만원 내외,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없음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5.06.30.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 기숙사 용적률 상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30)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1차: '15.4.14.~'15.5.26./2차: '15.5.28.~'15.6.12.)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15년 업무계획, 규제기요틴 과제)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된다.

②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15년 경제정책방향) 산업단지와 연결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안)

③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15년 업무계획)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법률위임 사항)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2015.06.30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부,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접수 결과 공모에 920건 몰려...22건 선정해 실제사업으로도 연계·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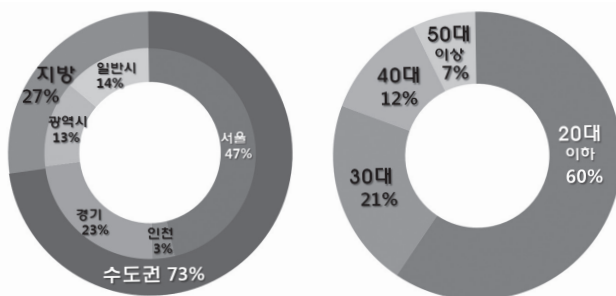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참신하고 실용적인 개발구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4.1~5.22일)한 결과 920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개발구상의 제안수준에 따라 일반제안은 829건, 전문제안은 91건이 접수되었다.

제안작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673건(73%), 지방 247건(27%)이며 서울이 428건(47%)으로 가장 많다.

제안자의 연령별 분포는 행복주택 주입주계층인 2030세대가 681건(74%)이며 이외 계층이 239건(26%)이다.



■ 국민제안 지역별 · 제안자 연령별 분포현황

심사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의 충실성,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개발구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당선작은 일반제안과 전문제안 각각 11건 내외로 선정하여

7월초에 확정 발표하고, 지역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계획이다.

2015.06.04.

국토부,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및 3만8천호 입지 추가 확정

3만8천호 입지 추가로 총 6만4천호, 정부목표 절반 육박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6.30일에 있다.

접수기간은 7.8~9일, 당첨자 발표는 9.17일이며, 입주는 10.27일(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시작된다.

사이버모텔하우스(<http://happyhousing.kr> 또는 행복주택.kr)에 접속하여 첫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



■ 행복주택 입주 4개지구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을 확정하였다.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하였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 소득이 낮은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하여 선정)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 정부+지자체+공기업간 협업 시행〉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 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이로써 '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현재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승인 진행현황(6.26일 기준)

지역 (지구수)	지구명		총호수
	사업승인 완료	사업승인 협의중	
계	12곳, 5,427호	8곳, 5,802호	11,229
서울(4곳)	상계잠암(48), 천왕8(298), 마천3(148), 공릉(100)	—	594
경기(7곳)	고양지축(890), 김포양곡(358), 파주출판(280)	화성발안(610), 양주옥정(1,500), 포천신읍(18), 평택고덕(597),	4,253
부산(3곳)	과학산단(540), 동래역(395),	서구아미(731)	1,666
충북(1곳)	제천미니북합타운(420)	—	420
세종(1곳)	세종행복(1,500)	—	1,500
경남(2곳)	—	양산물금2(900), 경남혁신(966)	1,866
전남(1곳)	목포용해(450)	—	450
강원(1곳)	—	춘천거두(480)	480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2015.06.29.

국토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선정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



■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수상자	건축사사무소
서울 김연아	아이앤 건축사사무소
영주 이상섭	강림씨엠건축사사무소
군산 노관식	건축사사무소 상상
부산 오신욱	라움 건축사사무소

2015.06.30.

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공고되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온영태)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금번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 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되어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하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하였다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1월까지 용역 완료, 광주 공공디자인 정책

정립·범죄예방디자인 계획 등 마련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광주광역시는 광주만의 도시정체성을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공공디자인 장기 종합플랜이 될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우수디자인 인증마크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시는 광주디자인센터, (주)에 이치스퀘어 워크 콘소시엄과 계약하고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착수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정책 개념과 적용범위 정립,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외에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반영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용역에서도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명실상부한 더불어 사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06.01.

울산시, '도시창조 기본계획' 수립 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미래 청사진 담아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등 도심 활성화 정책을 기조로 하는 '울산 도시창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총 6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짜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등 총 1,8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6대 분야는 •도시창조(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등) 정책방향 설정 •창조적 도시 공간 창출 •울산의 정체성 확보 •시민 공감 도시디자인 •체계적 경관 기반 관리 •파생적 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연계사업 등으로 짜였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도시창조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관기록화, 경관계획,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야간 및 해안경관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16개 사업이 마련된다.

'창조적 도시 공간 창출'과 관련, 언양 중심 시가지 재생 디자인, 중구 달빛누리길 조성,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조 등 23개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옛흔적 등 기존의 것에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산업단지 색채 및 안전 디자인 지원, 한글마을 조성, 울산 경관 기록화 등 10개 사업이 이뤄진다.

'시민공감 도시 디자인 분야'는 도시디자인 공모전, 옥외광고대상전, 간판개선 시범사업, 경관협정 운영 지원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체계적 경관 기반 관리'와 관련,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시설물 디자인 특허청 등록관리 등 8개 사업이 추진된다.

'파생적 도시재생, 경관, 디자인 연계 사업'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전통시장 친환경 쇼핑문화조성,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화암추 등대 관광자원화 등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2015.06.17.



광주시,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제정

광주광역시 도로과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 중장기 대책을 올해말까지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담당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노후, 부실시공, 지장장애물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보도블록을 일제 정비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시는 상당수 보도가 노후되고 파손, 침하 등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걷기 어렵고, 한전배전함, 보도턱, 볼라드 등 장애물이 산재해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제정,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보도공사 실명제 운영, 시민 보행길 모니터링단 운영, 연말 보도블록 교체 공사 관행 개선, 보도공사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5.06.25.

부산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민행복과 신가치 창조 부산 실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부산시는 향후 10년간의 도시재생전략과 28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7월 2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3.12.5.)에 따라 법정계획으로는 전국 최초로 수립되는 종합적 도시재생계획이다.

또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에는 이 계획에 부합하도록 구·군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도시특성을 반영하면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곳과 구·군의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반영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높이려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14년 5월 용역을 발주하고 쇠퇴 및 잠재력 진단, 재생전략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등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총 5차례의 보고와 자문을 받고 16개 구·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부산시는 도시를 크게 4개 권역(원도심,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으로 구분해 광범위한 쇠퇴지역에 대한 전략구상을 마련했다. 그 중 △부산항 일원을 도심수변구역 △사상공업지역 일원을 강변산업구역으로 구분했다.

전략구역 구상에는 국내 최대의 연안도시로서 바다, 하천 등 수변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산시의 특성 반영을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과 미래 부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신가치를 창조하려는 부산형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담으려 노력했다.

시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7월 2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2015.06.29.

광주시,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설계 공모 공정성·투명성 등 확보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는 건축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참여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공모 방식 개선안을 21일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설계공고 시 또는 작품접수 후 참여자 입회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모작 전시 계획은 사전에 명시하고 당선작과 입상작, 참여작품을 시청 1층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진행 참관하는 방법으로 신뢰받는 심사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개선된 건축설계공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5.06.22.

광주시, 인본디자인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시설 개보수에 인본디자인 적용, 전 과정 주민·전문가 협력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광주광역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시설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본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본디자인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의 독창적인 디자인 개념이다. 활발한 인적 교류와 자유로운 시민 활동을 통해 사람과 삶의 문화적 표출, 도시 활력 창출에 기여하는 디자인으로,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인본 디자인 시범사업'은 보조사업자로(사)장애없는 세상만들기가 확정됨에 따라 6월중에 사업대



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턱제거, 출입구 및 경사로 등 접근로 개선,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 개선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장애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주도 방식을 탈피해 행정은 민간비영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용주체인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해 공공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사업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도록 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학생,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본디자인교육, 장애체험활동, 특별강연회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5.06.02.

충북도·미래부,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복합형 친환경에너지 타운 본격 조성

충청북도

충청북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3일, 기후변화 문제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복합형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또한 충청북도와 미래부 간 「친환경 에너지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축방안이 발표되고, 1단계로 3개 대상 지역⁷을 선정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래부는 진천 지역에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복합 활용 기술, 계간축열 기술 등을 개발하여 실증단지를 조성(‘15~’16년)하고, 실증단지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17~’18년)후에 진천군에 이관한다.

진천군은 부지 확보 및 건축 지원과 함께 ‘18년 이후 지역 주민과 함께 에너지 타운을 지역의 에너지 산업, 관광, 교육 등의 랜드마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국내 최초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미래형 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를 일조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기생산에 활용하고,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을 복합 활용하여 난방 및 온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보급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계절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모았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계간(季間) 축열식 열공급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또한, 충북 진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복합 활용 기술의 표준화 및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체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03.

⁷ (미래부) 충북 진천, (환경부) 강원 홍천, (산업부) 광주광역시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17년 초 준공·개원

1일 최대 총 1,100명 수용 가능한 공연장·전시장·교육시설
갖춘 문화공원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1976년 설치된 개발시대의 산업유산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41년 만에 종합 문화공원으로 변신하기 위한 밑그림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착공한다. '17년 초 준공 목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지난 '74년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비상시에 대비해 '76년 건설한 민수용 유류 저장시설로, 지난 40년간 시민 접근이 철저히 통제돼오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지역주민, 자치구청 등에 의한 공원화 사업 건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서울시는 작년 8월 국제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14. 10~15. 4) 과정에서 실제 기획·연출·운영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했다.

'워킹그룹' 자문회의 9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 18회 등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안에 반영했다.

이에 시는 기존 관 주도 방식(시설 설치→운영방식 결정)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자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참여로 기획·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최적화된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新도시재생 프로세스'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비축기지' 조성 대상지는 총 14만㎡ 규모로 ▲유류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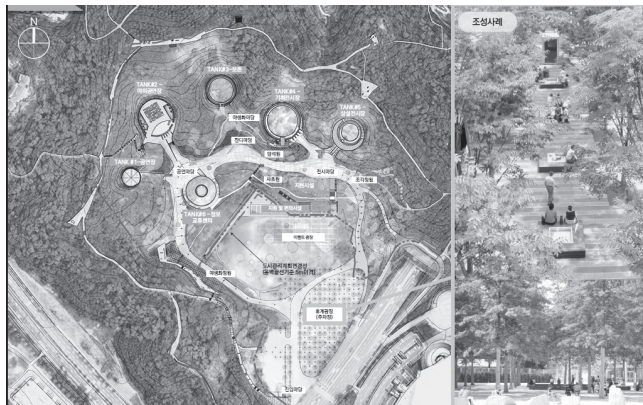
장탱크(10만1,510㎡) ▲주차장 부지(3만5,212㎡) ▲산책로(3,300㎡)로 구성된다.

1번·2번 탱크는 해체 후 주변의 암반지형과 콘크리트 옹벽과 어우러지도록 건물을 신축, 다목적 파빌리온(1번), 실내·외 공연장(2번)으로 변신한다. 3번 탱크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운영한다.

4번 탱크는 기존 탱크 안에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된 투명 탱크가 들어간 형태의 독특한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탱크 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과 파이프 기둥에 의해 마치 울창한 숲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번 탱크는 내·외부의 공간개념을 전환, 내부는 그대로 뒤서 기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외부와 콘크리트 옹벽 바깥부분은 '석유비축기지'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6번 탱크는 최대 300명 수용 가능한 '정보교류센터'로, 시민 누구나 와서 서울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열람실 기능을 할 예정이다.



■ 조성계획(마스터플랜)

2015.06.15.

서울시, 세운상가 활성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이_스케이프의 'Modern Vernacular(현대적 토속)'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서울시가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이_스케이프(김택빈, 장용순, 이상구) 건축사사무소의 'Modern Vernacular(현대적 토속)'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화) 밝혔다.

※ 총 82개 작품 제출(국외_44개, 국내_38개)

당선작은 1968년 거대구조물인 세운상가가 들어서기 전, 실핏줄 같은 골목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집들과 삶의 방식을 기존도시 조직인 '토속'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를 현대에 속하는 세운상가 데크와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결, 확산시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현대적 토속'도시 구조

로 재현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남북(종묘~남산)으로는 끊어진 보행데크의 축을 복원하고, 동서(종로~동대문)로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길들의 공간을 찾아내 공간, 시각적으로 연결했다.

또, 위·아래로는 중간레벨의 데크를 추가해 데크 상, 하부가 서로 유기적이고 삼차원적으로 그물망(network)처럼 연결되면서, 기존도시 조직과 세운상가 사이의 끊어진 조직을 뜨개질 하듯이 연결해 나가는 것을 제안했다.

남북 보행데크 복원 : 현재 높이가 너무 높아(3층 높이) 한번에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남북을 잇는 보행데크는 플랫폼 셀(Platform Cell)이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같은 모듈화된 박스를 데크 위·아래에 끼워 넣어 지상층(기존 도시 조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승효상 심사위원장(서울시 총괄건축가)은 "당선작은 오래된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흔적들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더했다는데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당선작은 확정된 설계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분야별 전문가 소통을 통해 설계를 구체화할 것이며, 이_스케이프(김택빈)와 설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후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세운상가를 사랑하는 문화·산업 등 현장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세운포럼 등에서 논의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위해 3층 데크, 초록띠공원 등에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설계 주안점을 두고 공모 당선자와 긴밀히 협의해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1단계 구간(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을 착공해 내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22일(월) 당선작을 비롯한 총 8개 작품을 오는 30일(화)까지 신청사 1층 로비에 전시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한다.

한편, 세운상가군은 7개 건물 총 1km구간으로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평적 랜드마크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구간을 공공선도를 통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특히 시는 세운상가군과 그 주변이 전자·전기, 기계·공구를 비롯해 인쇄·기획, 인테리어 자재 등 다양한 업종의 집적지인 만큼 이 일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1등 당선작



■ 1등 당선작(조감도)

2015.06.16



전남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광양·강진 2곳 추가 4월 4곳 이어 또 선정...개소당 9천만 원 들여 특화 경관 조성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전라남도는 전남만의 우수 경관 자원을 보전·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5년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대상지로 광양시와 강진군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는 1개소당 9천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를 각각 4천 500만 원씩 투입해 7월부터 특화된 경관 조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공모 신청된 16개 시군의 18개소를 대상으로 도 경관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6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쳐 화순, 담양, 신안, 장성 등 4개소를 선정했으며, 평가순위에 따라 이번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광양시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광영동에 노후 담장 정비, 벽면 녹화, 녹지공간(한평 공원) 조성, 보행공간 확보 등의 사업을 주민 참여 형식으로 추진한다.

강진군은 강진을 대표하는 '영랑생가'가 위치한 강진을 탐동마을에 안길 정비, 노후 담장 및 대문 정비, 웅벽디자인 개선, 녹색 쉼터 조성 등의 경관 개선사업을 마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전남다운 경관 개선사업은 전통 담장 조성, 마을 안길 정비, 조망공간 조성, 관광지 진입로 주변 가로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마을에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2015.06.22

경남도, 창원·밀양시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범죄예방 줄인다

경상남도 건축과

경남도는 올해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CPTED)를 적용, 각종 범죄 예방 및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 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이다.

노후 건물이 많고 골목이 좁은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 등에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셉테드는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로 지난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는 도민



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창원시와 밀양시에 안심골목길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범죄발생취약지역(Hot Spot) 5곳을 추천받아 최종 선정 중에 있고 8월경 착공하여 연내 준공 계획이다.

밀양시는 밀양여고 주변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이미 선정하고 원할한 사업을 위해 밀양시, 밀양경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 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앞으로 7월경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

도는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5.06.23

대구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본격 추진

지역 43개 기업, 기관·단체 4억 8천만 원 지원, 300호 집수리 시행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시는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업의 참여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사랑의 1000호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참여를 약정한 43개 기업,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4억 8천여 만 원을 투입하여 구·군과 복지관에서 추천 받은 노후주택 300호를 6월부터 수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12년도에 동고동락 집수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151호의 집을 수리하였고,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1000호의 집을 수리하는 목표로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⁸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715호의 집을 수리하였으며, 올해 300호 이상의 집을 수리하여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사업의 대상과 지원규모는 맞춤형 개별급여 수급자가(생계, 의료, 주거) 소유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노후주택의 도배·장판, 천정, 보일러, 전기설비, 담장, 새시, 싱크대 등 생활필수시설을 개보수 또는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호당 평균 200만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이다.

집수리공사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있는 대구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자활의 기회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5.06.26

⁸ 2013년 「사랑의 1000호집수리사업」: 447백만 원 투입, 노후주택 363호 수리
2014년 「사랑의 1000호집수리사업」: 570백만 원 투입, 노후주택 352호 수리



울산시,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6월 22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도시창조국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는 최종보고서(안) 및 화보집(안) 내용 검토, 경관기록 누리집(홈페이지)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보고서(안)에는 △경관기록의 기획연구 및 세부 실행 계획 △촬영일지(촬영일자, 위치, 촬영제원 등) △도시경관 스토리텔링 등이 실렸다.

화보집(안)은 과거의 울산, 경관유형 및 경관축별 현재의 울산, 울산시민 생활상 등의 스냅사진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보고회 후 관련 사항 최종 검토를 거쳐 7월경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화보집(e-book)과 기록 영상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은 변화하는 울산의 도시모습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 오는 6월 24일에 완료할 예정이다.

2015.06.22.

보도자료로 본 2015년 상반기 건축 도시 분야 주요 정책키워드

	전체		중앙		지자체	
	키워드	횟수	키워드	횟수	키워드	횟수
1	도시재생	27	에너지	6	도시재생	24
2	마을만들기	18	임대주택	5	마을만들기	13
3	에너지	15	단독주택	4	원도심	12
4	공공디자인	13	건축법	4	공공디자인	12
5	임대주택	12	행복주택	4	에너지	9
6	공공건축	10	그린리모델링	4	마을공동체	8
7	셉테드(CPTED)	9	녹색건축물	4	재개발	6
8	건축협정	8	건설기술	4	간판	6
9	경관개선	8	제로에너지빌딩	4	도시경관	6
10	범죄예방	8	원도심	4	임대주택	6
11	행복주택	8	최저주거기준	3	주거안정	5
12	재개발	7	건축협정	3	옥외광고물	5
13	한옥	7	공공건축	3	범죄예방	5
14	간판	6	공공데이터	3	한옥	5
15	건축법	6	도시재생	3	저탄소	4
16	골목	6	범죄예방	3	주거취약계층	4
17	녹색건축물	6	에너지효율등급	3	주거환경개선	4
18	도시경관	6	규제완화	3	리모델링	4
19	산업단지	6	주거혁신	2	행복주택	4
20	친환경	6	마을공동체	2	저층주거지	4
21	건축산업	5	민간개발	2	지역행복생활권	4
22	원도심	5	주거기본법	2	친환경	4
23	그린리모델링	5	재건축	2	안전	4
24	근린재생형	5	공공디자인	2	셉테드(CPTED)	4
25	낙후지역	5	안전기준	2	세운상가	4
26	단독주택	5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2	근린재생형	4
27	도시재생지원센터	5	주거복지	2	주거환경관리사업	4
28	리모델링	5	공동주택관리	2	지속가능	4
29	안전	5	주택도시기금	2	도시재생지원센터	4
30	옥외광고	5	안전사고	2	쇠퇴지역	3
31	임대료	5	임대주택정보체계	2	주택개량	3
32	재생에너지	5	재생에너지	2	공공시설물	3
33	제로에너지빌딩	5	건축데이터	2	골목길	3
34	주거안정	5	주거급여법	2	공공건축	3
35	건설기술	4	신진건축사	2	도시활력증진지역	3
36	공공시설물	4	친환경	2	보행환경	3
37	규제완화	4	건설현장	2	총괄건축가	3
38	대중교통	4	투자활성화대책	2	간판문화	3
39	마을공동체	4	저소득층	2	쌈지공원	3
40	보행공간	4	민간임대주택	2	대중교통	3
41	세운상가	4	노후산단	2	경관계획	3
42	쇠퇴지역	4	가로경관	2	주민주도형	3
43	안전관리	4	대중교통	2	옥외광고	3
44	에너지사용량	4	유도주거기준	2	도시재생활성화	3
45	옥상	4	에너지효율	2	재생에너지	3
46	저층주거지	4	소음	2	유흥공간	3
47	저탄소	4	옥상	2	낙후지역	3
48	주거취약계층	4	초고층	2	태양광	3
49	주거환경개선	4	고층형	2	세운상가	3
50	주거환경관리사업	4	에너지절감	2	주택재개발사업	3
51	주택도시기금	4	BEMS	2	마을공동체	3
52	지속가능	4	한옥	2	영구임대	3
53	지역행복생활권	4			농어촌지역	3
54	총괄건축가	4				
55	태양열	4				

- 분석자료 : 중앙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
- 분석방법 :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 추출 후, 전처리 작업으로 불용어 제거 및 단어 용례 일치 등 정제작업 진행, 빈출단어 분석은 TF-IDF 분석방법 활용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